



반성합니다



노설

연합뉴스가 요동치는 미디어 환경변화 파도의 한복판에 놓여있다.

보도채널 진출로 방송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통신시장에는 새 경쟁자가 등장했다.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면서 냉정한 자기반성과 통렬한 쇄신 없이는 지금까지의 영향력과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연합뉴스는 언제부터인가 위기이자 기회를 맞았다고 스스로 말해 왔다. 맞다. 위기이자 기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얻은 기회는 그 빛이 점점 바래고 있고 위기는 더욱 커져 간다.

연합뉴스는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사옥 재건축 등을 계기로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내놨다.

이런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내실도 함께 다져 왔는지 곱씹어볼 때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도 하락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연합뉴스 기사는 공정성과 신뢰성에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다. 꼭 보도해야 할 기사가 처리 안 된 경우도 있고 필요없는 기사가 송고된 적도 있다.

연합뉴스는 억울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냉정하게 살펴 봐야 한다. 겸허한 자세로 귀를 열어 합리적 비판을 받아 들이고 두 눈을 크게 떠서 현실을 봐야 한다.

경영진부터 평사원까지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성원들의 삶의 질 제고와 공정정보, 경영 감시 노릇을 해야 할 노조 또한 예외가 아니다. 최일선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기자들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취재하고 기사 쓰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닌지, 일반 기업체 사원보다 더 셸러리맨처럼 돼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조직 문화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일방적인 의사결정구조,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못 하는 주눅 든 분위기에서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없다.

합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른 인사가 없으면 소신껏 일할 수 없다.

보도채널이 실패하면 연합뉴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보도채널을 아무리 잘 해도 통신이 약해지거나 무너지면 두 회사 모두 온전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신이 제 역할을 못 하면 좋은 방송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가 가장 두려워 해야 할 대상은 독자요시청자다. 우리가 얻는 수익의 원천은 정부도 기업도 아닌 국민, 시민이기 때문이다. 민의를 읽지 못하고 민심을 잃으면 실패하는 건 정치만이 아니다.

당장 입안에 흘려드는 꿀, 달콤한 감언이설이 미래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선 안 된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정보보고가 간부 보고용입니까?

단순 흥밋거리에 그쳐선 안돼.. 정보공유시스템 개선 필요

◇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언론사에서 기자들의 업무 중 하나처럼 굳어진 정보보고. 원래 목적이 될까요. 간부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고된 업무에 지친 동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많은 기자들이 취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겠죠.

얼마 전 모 언론사가 '여기자 선발 때 얼굴을 보고 뽑아 빅히트를 쳤다'는 정보보고가 있었죠. 내용은 상상 그대롭니다. 또 모 대학 성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보고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만 공개된 것도 황당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의식에서라도 '원래 피해자가 누군지가 더 궁금하잖아'란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비단 이 두 가지 사례가 아니더라도 읽어보고 황당했던 정보보고가 있었을 겁니다. 차제에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보보고는 내용에 제한이 없고 구

체적일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이 회사에 여러 가지 차이점과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이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내용이 공유되었을 때 읽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 생각해보고 올리면 어떨까요. 소속 부서만 둘러봐도 이런 선배 저런 후배, 이렇게 살아온 부장 저렇게 살아온 동료가 뒤엉켜 있는데 그 정도 배려는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보보고를 작성하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전파하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별 '정보' 없이 분란만 일으킬 것 같은 정보보고는 과감하게 길(!)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짬 내서 올린 정보가 명확한 이유 없이 묻혀서도 안 되겠지만 '피곤지수'만 높이는 것이라면 데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정보보고도 마음대로 못 하겠군'하고 생각하는 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마음껏 정보보고를 하되 읽을

사람 생각도 해 가며 하자는 거죠. 기사도 읽을 사람 생각도 하면서 쓰고, 말도 듣는 사람 헤아려서 하잖아요.

◇ 체계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필요합니다

정보보고 얘기가 나온 김에 연합뉴스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군요. 출입처에서 취재원들이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런 현안을 물어오면 할 말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했던 경험 있으시죠. 이때 옆에 있던 타사 기자가 짹짹 물어대기 시작하면 난감함은 더욱 커집니다. 연합엔 정보보고 안 떴냐고 물어오면 우리는 원래 정보보고 안 보여준다고 해야 할지, 미처 확인을 못 했다고 해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 우리도 정보보고로 올라왔을 법 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공유 메일은 오지 않습니다. 타 부서 출입처의 정보는 기사로 확인하고, 행여나 기사가 안 나가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연합뉴스의 정보공유 시스템, 손 좀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보고를 취재원과의 대화에만 써먹는 것이라면 그리 난감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대기업과 정치권을 수사하거나 경찰이 유명 연예인을 조사할 때는 신속한 정보 공유는 기사작성에 꼭 필요합니다. 몇 시간 또는 심지어 며칠이 지나서야 정보보고가 들어오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타 부서에 알아볼 수야 있지만 스스로 없이 부탁할 만한 친분있는 선후배가 모든 부서에 있을 수는 없죠.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정보공유 시스템 정비 시급합니다.

정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널리 전파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본다고 생각하면 정보보고를 마음 놓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정보빈곤에 시달리는 애처로운 연합뉴스 기자들을 그냥 둘 순 없지 않을까요. 말랑말랑하고 별 '정보' 없는 정보보고, 게시판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정보공유 이 참에 고쳐봅시다.

북한 뉴스를 외신으로 접하다니...

AP 평양종합지국 개설 · 로이터도 교류 확대

최근 북한뉴스와 관련해 큰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평양지국을 개설하거나 북한의 영상뉴스를 세계 언론사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평양에 종합지국을 개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AP 지국이 개설되면 평양에 상설되는 서방의 첫 취재·사진지국이 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다른 서방 언론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 수준으로 AP의 북한내 취재망을 보장해 주기로 했고, 자사가 보유한 영상을 AP를 통해 국제사회에 배급하기로 했다.

AP는 이미 2006년 영상부문 계열사인 APTN의 비디오뉴스 지국을 서방언론 중 처음으로 평양에 개설해 운영해 왔다.

로이터도 조선중앙통신과 협약을 맺어 기존의 텍스트 기사, 사진에 더해 영상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국제적 언론사로써 최초로 북한에서 위성 안테나를 가동해 생생한영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서양 언론을 통해 접해야 하는 안타깝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AP와 로이터 모두 연합뉴스와 같은 통신사다. 통신사가 특정 색깔이 실리기 쉬운 신문사나 방송사보다 상대적으로 사실 보도 기능을 더 중시하는 특성이 감안됐을 것이다.

북한 취재는 연합뉴스뿐 아니라 남한 언론 전체의 문제이자 남북언론 교류의 문제다. 언론계를 넘어 남북교류의 문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범 정부적, 범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은 현 정권 들어서도 남북 언론 접촉을 여러 차례 제안해 왔으나 정부의 불허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AP, 로이터의 북한 취재망 확대를 절대로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성명을 참고로 소개한다.

회사 돌아가는 거 궁금하시죠

노조 홈페이지로 오세요.
그동안 듣지 못한 얘기가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게 있을 때도 들어와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알아보고 조사해서 답변 드립니다.
하소연할 게 있을 때도 들어오세요.
어떤 얘기라도 다 들어드리고 필요한 조치하겠습니다.

<성명서>

이명박 정권의 남북 언론교류 차단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미국의 AP통신이 최근 평양 종합 지국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P 측은 평양종합 지국이 개설되면 북한 수도에 상설되는 서방의 첫 지국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측 언론사의 이번 합의는 북한과 미국 정부 당국간 갈등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지연시키는 비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는 북미 갈등 등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사태를 걱정하는 지구촌에 제시된 매우 긍정적 메시지로 정치와 비정치적 분야는 분리하는 원칙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미국 AP통신의 평양 지국이 개설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의 심정은, 박수갈채를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착잡하다. 심각한 적대적 관계인 미국과 북한이 언론을 통해 상호이해 증진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전이 뿌리내리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기뻐하면서도 남북 언론사간에 평양이나 서울 지국이 먼저 생겼어야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무엇보다 남북 언론교류를 담보상태에 빠트린 이 정권에 분노한다.

남북이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언론 교류 협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북미간 언론 관계 증진보다 남북간 언론 관계 증진이 앞섰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이런 당위성에 입각할 때,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인 대북 정책, 특히 미국보다 한술 더 뜨는 식의 대북 공세를 취하면서 남북간 언론은 물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차단하는 것을 강력 비판한다.

한반도와 함께 분단 상태인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평화통일 지향적으로 변화한 것은 지난 2001년 중국 2개 언론사 기자들이 대만에 상주한 뒤부터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양안관계는 그 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하늘과 바닷길이 뚫리고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 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대만과 달리 남북 당국 관계는 2008년 이후 크게 냉각되면서 지난 수년간 쌓았던공든 탑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남측 정부가 북측과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외면한 채 비핵개방3000이라는 일방적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남북관계를 전면전쟁 일보직전의 상황으로 악화시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의 비현실적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특히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천안함 사고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5.24조치를 취하고 이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유발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대북 투자 기업들은 도산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쌀값 하락 등으로 농촌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정치와 인도적 지원은 분리한다는 기본 상식조차 외면한 채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도 만류하는 듯한 냉혈한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5.24 조치 이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언론분과위원회와의 실무접촉 등을 시도할 때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불허한다는 비합리적인 조치를 거듭 취했다. 현정권은 남북 간 언론교류를 차단하는 등 민족지상 과제인 평화통일 노력에 제동을 거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언론교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언론교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에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이명박 정권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자금의 남북 언론 교류를 차단하는 조치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비핵·개방·3000과 같은 반통일 정책을 즉각 백지화하고 남북언론교류를 정상화시켜 서울과 평양에 남북 언론 지국 등이 설립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1년 7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언론본부